

제266호 (2010. 7. 5)

■ 건설 경기

- 5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 27% 감소

■ 정책·경영

- 2010년 국내 건설투자 1.4% 증가 전망
- “장수 중소 건설업체, 新사업영역 개척해야 지속적 생존”

■ 정보 마당

- 스웨덴 건설근로자의 사기 진작 및 육성 방식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건설업계 구조조정, 그 이후가 더 중요

5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 27% 감소

- 계절적 비수기, 금리인상 우려, 주택경기 침체 등 3중고에 기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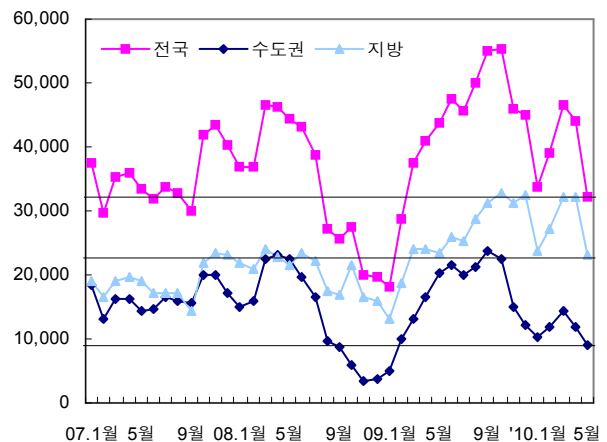
■ 수도권에서 큰 폭 감소, 지방으로 확산 양상

- 5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2개월 연속 감소한 3만 2,141호로 전월 대비 26.9%, 전년 동월 대비 26.5% 감소함.
 - 최근 1년간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인 2009년 9월(5만 4,926호)의 58.5% 수준이며, 평균 거래량(2006~09년 : 4만 1,841호) 대비로는 23.2% 감소
- 4월 중 수도권에서 큰 폭의 감소를 보였으며, 5월 들어 지방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임.
 - 수도권은 전월 대비 24.2%, 전년 동월 대비 55.4% 감소하며, 지난달에 이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임(전월대비 변동률 : 서울 -30.3%, 인천 -26.8%, 경기 -20.9%).
 - 특히, 강남3구는 지난 2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감소함.
 - ※ 강남 3구 거래량 : 2월 1,009호 → 3월 885호 → 4월 539호 → 5월 402호(5월 평균 거래량 1,024호)
 - 지방 5개 광역시는 전월 대비 21.1%, 전년 동월 대비 6.9% 감소함(전월대비 변동률 : 울산 -27.3%, 부산 -22.3%, 광주 -22.1%, 대전 -19.4%, 대구 -15.3%).
 - 기타 지방은 전월 대비 33.0% 감소, 전년 동월 대비 22.3% 증가함. 특히 전라권에서 -54.2%의 큰 폭 감소가 있었음.

<실거래가 거래량 추이>

(단위 : 호,%)

	2009.5	2010.4	2010.5	전월비	동월비
전국	43,704	43,975	32,141	-26.9	-26.5
수도권	20,248	11,909	9,028	-24.2	-55.4
5개 광역시	11,594	13,682	10,794	-21.1	-6.9
기타지방	10,070	18,384	12,319	-33.0	22.3
강원	1,110	1,755	1,328	-24.3	19.6
충청	1,347	4,877	3,384	-30.6	151.2
전라	2,767	4,682	2,144	-54.2	-22.5
경상	4,726	6,900	5,322	-22.9	12.6
제주	120	170	141	-17.1	17.5



주 : (-)선은 5월 거래량임.
자료 : 국토해양부

■ 거래 침체 3대 요인 : 계절적 비수기, 금리인상 우려, 주택경기 침체

- 5월은 일반적으로 이사철 종료와 함께 흑서기에 들어서는 시점으로 거래가 둔화되기 시작함.
 - 거래량 변화의 주기적 특성으로도 하락 국면에 있음.
-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정책이 최근 들어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인상 등의 출구전략 시행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최근 코픽스(COFIX) 연동 대출 전환 등으로 금리 인상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나, 금리 인상이 주는 심리적 위축이 더 크게 나타날 전망이다.
 - ※ COFIX(Cost of Funds Index)는 국내 9개 은행(정보제공은행)들이 제공한 자금조달 관련정보를 기초로 하여 산출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로서, 기존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 변동에 둔감함.
- 최근 아파트매매가격 변동률은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추가적인 하락도 예측됨에 따라 수요자가 주택 구입에 따른 향후 자본이득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임.
 - 특히, 수도권 경기, 인천은 2009년 11월부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음.
 - ※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 3월 -0.04% → 4월 -0.31% → 5월 -0.34% → 6월 -0.30%(부동산114)

■ 실물경기 위축에 따른 추가적인 대책 필요

- 수요자들은 추가적인 주택가격 하락 전망과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으로 주택 구매를 미루고 있음.
 - 주택 구매 지연에 따라 전세수요가 증가되고, 전세가격 강세 현상이 나타남.
- 그 동안 금융 위기로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유지해 왔던 세계 각국이 최근 남유럽발 국가재정 위기 및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재정지출 축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세계 경제 성장률이 저하될 가능성이 커짐.
 - 세계 경제 위축으로 향후 국내 경기도 위축될 전망
- 기존의 세제 혜택(취·등록세 및 양도세 완화)과 더불어 거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정부가 직접적으로 거래에 영향을 미치면서 서민주거안정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매입 임대주택사업 확대 등의 고려 필요

엄근용(연구원·kyeom@cerik.re.kr)

2010년 국내 건설투자 1.4% 증가 전망

- 작년 공공 토목 발주 급증 등 영향, 건축투자도 소폭 회복세 -

■ 양호한 토목투자 실적 등 영향으로 소폭 증가

- 2010년 국내 건설투자는 지난 2년간 국내 건설수주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공공 토목공사 발주 급증과 4대강 사업 영향 등으로 토목투자가 양호하고, 건축투자가 소폭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전년 대비 1.4% 증가할 전망이다.

< 2010년 건설투자 전망 >

구 분	2007	2008			2009			2010(e)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건설투자 (조원, '05년 불변가격)										
토목	61.9	26.9	34.9	61.8	32.2	37.8	70.0	32.8	38.9	71.6
건축	96.5	44.8	47.3	92.1	42.3	48.1	90.4	42.9	48.5	91.4
주거	43.7	19.9	20.4	40.2	17.9	19.7	37.6	18.0	19.8	37.8
비주거	52.8	24.9	26.9	51.9	24.4	28.4	52.9	24.8	28.8	53.6
계	158.4	71.7	82.3	153.9	74.6	86.2	160.8	75.7	87.4	163.0
증감률 (% , 전년동기비)										
토목	3.8	-2.1	1.3	-0.2	19.7	8.4	13.3	1.9	2.7	2.3
건축	0.0	-0.9	-7.8	-4.6	-5.6	1.8	-1.8	1.3	0.8	1.0
주거	-3.0	-5.9	-9.6	-7.8	-10.1	-3.1	-6.5	0.8	0.1	0.4
비주거	2.6	3.5	-6.3	-1.8	-2.0	5.6	1.9	1.7	1.2	1.4
합계	1.4	-1.4	-4.0	-2.8	4.1	4.7	4.4	1.4	1.4	1.4

주 : 2010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년도

■ 토목투자 양호, 비주거 건축투자 회복세 지속, 주택투자는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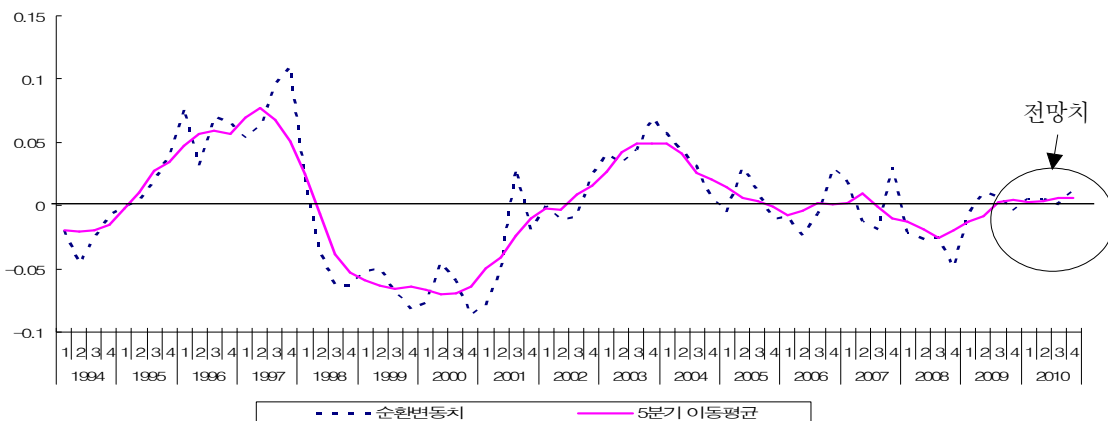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작년에 13.3%나 증가한 토목투자는 지난해 발주가 급증한 공공 토목수주의 기성 진척 4대강 사업 조기완공을 목표로 한 기성 진척, 국내 경기 회복에 따른 플랜트 투자와 신울진 원전을 비롯한 발전설비 투자가 증가하는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하여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 2006년 이후 4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주거용 건축투자는 올해는 기저 효과와 작년 4/4분기 이후 그동안 연기된 주택사업의 착공, 하반기 보금자리주택 착공, 기존 미분양주택의 일부 분양(재고에서 투자로 전환), 올해 주택수주의 증가세 전환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짐.

- 그러나, 올해는 주택수주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수주 상승을 주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수주와 착공 간 시차가 길어지고 있음.
- 아울러 2007년 4/4분기~2008년 초 급증한 주택 분양 물량이 하반기에 준공됨으로써 향후 주거용 건축투자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주거용 건축투자는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 비주거용 건축투자는 국내 경기 회복세가 지속됨에 따라 작년 하반기 이후 시작된 회복세를 올해 말까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년 대비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작년 상승 국면 진입, 올해는 주택투자 부진으로 횡보세 예상

- 국내 건설투자는 작년 경기부양을 위한 SOC 예산 증액과 조기집행으로 4년 반 동안의 하강국면을 마감하고 상승국면으로 전환되었지만, 올해 건설투자가 1.4% 상승에 그칠 것으로 보여 작년의 빠른 상승세를 지속하지 못하고, 횡보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국내 건설투자가 작년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횡보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건설투자의 30%를 차지하는 주택투자의 회복이 부진하기 때문임.
 - 토목투자가 작년에 이어 양호하고, 비주거 건축투자도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어 주택 투자가 지난 4년간의 마이너스(-) 성장을 마무리하고 회복세로 확실히 전환된다면 국내 건설투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상승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큼.

〈국내 건설투자 순환변동주기〉



주 : 한국은행의 건설투자 데이터(2005년 연쇄가격 기준 계절조정계열)를 HP필터로 필터링함.

이홍일(연구위원·hilee@cerik.re.kr)

“장수 중소 건설업체, 新사업영역 개척해야 지속적 생존”

– 공공사업 안주는 성장의 걸림돌, 틈새시장 발굴 등에 주력해야 –

■ 해방 이후 근대적 건설업 태동, 창업 40년 이상이면 장수 건설업체

- 초창기 건설업 진출 업체 가운데 상당수는 해방 이후 미 군정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참여했거나, 한국전쟁 종전 후 전후복구 사업 참여를 계기로 건설업에 입문한 경우가 많음.
 - 처음부터 건설업을 하지 않고 전기공사나 자재납품업을 하다가 건설업에 대해 매력을 느껴 나중에 건설업을 시작한 사례도 많음.
- 업력 40년 이상인 115개 건설업체 중에서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 이하인 중소기업체가 83개로 나타남.
 - 30위 이내 업체는 12개(10.8%), 31~100위 업체는 19개 업체(17.1%)로 중견·대기업이 약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안전 위주의 공공사업 주력으로 지속적인 생존 가능

- 장수 중소기업체들의 도급공사 비중은 98.1%로 매우 높음.
 - 공공공사의 비중이 65.7%로서, 중견·대기업 평균 50.5%와 비교하여 15.2%p 높음.
- 공공공사 중에서도 특히 지자체 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해당하는 32.5%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견·대기업의 지자체 발주 공사 비중은 중소기업의 1/3에도 못 미치는 9.1% 수준
- 좁게 설정된 건설상품 시장에서 ‘한우물 파기’를 하기보다는 공공발주 공사에 주력하고, 공공공사 중에서도 일반적인 토목공사에 주력하는 업체가 많았음.
- 안전한 공공공사에 전념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함.
 - 공공공사 위주로 사업을 하여 회사 규모가 크게 늘어나거나 많은 이윤을 남기지는 못했어도 내실 있는 경영 성과를 계속 유지해 왔다고 자부하는 업체가 많음.

■ 주택사업이나 자체 개발사업 등을 기피하는 보수적 성향 강화

- 그러나 일부 업체들은 1980~90년대 주택시장의 호황기에 관성대로 공공공사에만 집착하여, 주택시장에 진출하지 못했던 것을 아쉬워하기도 함.
 - 주택시장에 적극 진출했다면 더 성장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라는 낙관적 가정도 함.
- 장수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86%에 불과, 채무 발생을 몹시 꺼리는 특성이 있음.
 - 창업 이래 무차입 경영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수주하지 않고, 그 결과 한 번도 영업 적자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도 있음.

■ 시공능력 순위 낮을수록 매년 순위 더 낮아져

- 장수 건설업체 중 시공능력이 1,000위 이하인 업체도 20개 업체로 전체의 18.0%를 차지
 - 수백년 이상 기업활동을 한 외국의 장수기업들도 기업규모는 중소기업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 절대적인 사업기간과 기업규모가 비례하는 것은 아님.
- 평균적으로 500위 이내 업체들은 자체적인 경쟁력을 갖고 시공능력 순위가 상승 또는 현상을 유지하지만, 그 이하의 업체들은 계속 순위가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짐.
 - 시공능력 순위 500위를 경계로 분화가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됨.

■ 공공공사 수주는 한계 상황, 민간도급 등 새로운 사업영역 개척 시도

- 장수 중소기업들은 그들이 장수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으로 외형을 키우려 무리하지 않으면서 공공공사에 주력해왔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동시에 아직까지 중소기업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도 공공사업에 안주해 왔기 때문이라고 자평
- 하지만 건설업체 수가 급증하면서 공공공사 수주 여건은 악화되었고, 최저가공사 등의 확대로 수익성이 낮아져 공공공사 편중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이 과제로 대두
 - 일부 업체들은 공공공사에만 의존해서는 생존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민간 건축 분야에서 틈새시장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평가

권오현(연구위원·ohkwon@cerik.re.kr)

스웨덴 건설근로자의 사기 진작 및 육성 방식

- 고용안정 및 고임금 확보, 공업고등학교 교육의 현장성 제고를 통해 숙련인력 육성 -

■ 스웨덴 건설업체 및 종사자 수

- 2008년에 건설업종사자수는 약 30만 명이고, 약 90%의 건설업체는 20인 미만 규모임.
 - 스웨덴 건설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5년 최고 17%에서 감소하여 2008년에는 8%를 차지함. 최근 약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스웨덴에는 약 12,000여개의 건설업체가 있는데, 10여 개의 대규모 건설회사를 제외하고는 약 90%가 20인 미만의 소기업임. 근로자의 약 60%는 50인 이상 업체에 고용됨.

■ 공공공사의 낙찰률 및 저가수주 억제 요인

- 비용 측면의 낙찰자 선정 방식은 전체 생애기간을 고려한 최저가낙찰 방식임.
- 공공공사 낙찰률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으나 발주자가 생각하는 공사원가나 건설업체의 낙찰가가 거의 비슷하거나 100%를 초과할 것이라고 응답
 - 단체협상 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불해야 하므로 그 이하로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음.

■ 대형 건설업체 NCC사의 고용구조 및 현장의 근로조건과 도제 고용

- 2위 규모의 대형 건설업체로서 주택 건설, 도로 건설, 댐 건설 등이 주요 분야임.
 - 전체 직원 수는 7,000명인데, 약 5,000명이 기능직이고 약 2,000명이 사무직임. 이들은 거의 고용계약을 체결한 정규직임. 기능직은 주로 골조 직종과 도로 직종임.
 - 주택 공사의 경우 대체로 공사금액의 약 50%(골조공사)를 NCC사가 직접 시공함.
- 목공, 전기, 배관 등 8개 직종 60명의 근로자와 4명의 도제가 일하고 있던 아파트 공사 현장의 경우, 30명은 NCC사 소속이고, 30명은 다른 12개 건설업체의 근로자였음.
 - 이들 근로자들의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임.
 - 도제 기간은 2년~2년 반인데 이 기간이 종료되면 거의 정규직으로 채용함.

* 2010년 6월 스웨덴의 아파트 건설 현장 출장 중 현지 관련 기관 담당자와의 면담 및 자료를 정리한 내용임.

■ 사기 진작의 주요 요소는 ‘고임금’과 ‘고용안정’

- 직업적인 가장 큰 전망은 고임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임.
 - 도제 과정을 거친 20세 건설근로자의 임금은 월 35,000~40,000크로나인데, 대학을 졸업한 고등학교 선생님은 임금은 25,000~30,000크로나임.
 - 고등학교 실습 수당도 2학년은 정상 임금의 43%, 3학년은 53%를 받음. 도제 1년차는 정규 건설근로자 임금의 65%, 2년차는 75%, 3년차는 88% 수준의 수당을 받게 됨. 도제 기간의 임금이 일반 상점 정규 직원(30년 근속)의 임금보다 높음.
 - 자격증의 소지 여부에 따라 임금은 약 10~15%의 격차가 남.
- 1988년의 「고용안정법」 개정이 기능인력의 90%가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계기가 되었음.
 - 스웨덴의 건설근로자는 ‘안정된 직업인’이라는 이미지가 강함.
 - 기능인력 정규 고용을 통해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향상, 유능한 숙련인력의 책임 시공, 산재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됨. 또한 동절기 공법 개발을 통해 과거에 당연시하던 2~3개월의 겨울철 공사 중단 기간에도 생산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음.

■ 고등학교 과정을 통해 기술 숙련, 도제 과정 후 자격증 취득

- 건설산업 차원의 운영기구를 두어 건설 현장의 특성을 반영함.
 - 일반적으로 3년간의 고등학교 교육 과정(2,800시간)을 마치고, 2년 내지 2년 반 정도의 도제 과정(4,000시간) 등 총 6,800시간을 거친 후 자격시험을 치르게 됨.
 - ‘건설산업직업위원회(Byggnadsyrkesnämnden)’는 도제교육 프로그램과 직업훈련에 대한 자격심사 및 자격증 관리를 주관하며, 건설산업 사용자와 건설노조의 대표들로 구성됨.
 - ‘건설교육프로그램위원회’는 직종 및 정원의 결정, 도입된 신기술의 반영 등을 담당함.
- 고등학교(gymnasium) 과정의 현장성 제고를 통해 숙련인력 육성의 기반을 구축함.
 - 교육과 현장실습을 병행하고 있음. 1학년의 경우 학기말의 4주, 2학년과 3학년의 경우 16주를 현장 실습에 할애함. 선생님의 경우 건설 현장 경험이 필요함.
-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2~3년의 도제 과정을 거친 후 자격증을 취득함.

심규범(연구위원·gbshim@cerik.re.kr)

■ 주요 정부 부처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6.29	한반도선진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례 정책토론회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 참여 - 발표 주제 : 주택시장 침체와 건설산업의 활성화 방안
7.1	국토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건설공급과 주최 '하자심사분쟁조정제도' 개선 관련 자문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두성규 연구위원 참여 - 하자분쟁조정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법조계, 학계, 업계)의 자문
7.2	한국초고층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3차 초고층 국제 심포지엄(지속가능 초고층 건축, 도시 제도 방향)에 건설 관리연구실 이복남 연구위원 사회 및 주제발표 참여 - 발표 주제 : 초고층 건축의 국가제도 방향
	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안전보건포럼 - 건설분과 2차 회의'에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연구위원 참여 - 국경위 건설 분야의 안전보건 선진화 방안과 관련한 후속 조치

■ 신규 연구과제 발령 현황

과제명	연구 방향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건설업 시공능력평가제도의 보완 필요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1년 상장 건설업체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라 기업의 각종 재무 관련 지표들이 변경될 예정 ▪시공능력평가제도의 상장사와 비상장사 간의 조정 등 경영 상태 관련 평가 요소의 변경이 불가피한바,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제도의 보완 방향을 검토할 예정

■ 하반기 연구원 주요 행사 일정

월	주요 행사 일정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반기 지방순회간담회 개최(8~9월)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1년도 연구과제 제안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건설산업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세미나」 개최 ▪제7회 건설보증연구포럼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0년도 연구자문위원회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규제의 합리화 방안 세미나」 개최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 이사회 개최 ▪「2011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 개최 ▪「글로벌 녹색시장의 사례 및 동향 세미나」 개최 ▪「제7기 건설산업최고전략과정(ACPMP)」수료식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종무식 ▪ 제8회 건설보증연구포럼

건설업계 구조조정, 그 이후가 더 중요

지난 달 25일 시공능력평가 300위 이내 건설업체에 대한 신용평가결과가 발표되었다. 16개 중견 건설업체가 워크아웃과 퇴출대상으로 평가되면서 시장의 충격이 만만치 않다. 더욱이 50위권 이내의 대형건설업체들도 5곳이나 포함되어 있고 퇴출대상에는 상장건설업체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건설업체들도 가뜰이나 침체된 건설 및 주택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권의 대출심사 강화와 각종 사업의 불가피한 위축으로 인해 향후 경영의 방향에 대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번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는 제각각이다. 시장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사업 확장에 나선 건설업체의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건설 자금 조달의 구조상의 문제이며, 금번 구조조정은 장기적인 건설 및 주택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금번 구조조정은 건설업계에 큰 여파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금번 구조조정 이후라고 할 수 있다. 학술적으로 ‘구조조정’은 거시적으로는 경제발전 단계나 여건 등이 변화함에 따라 도태와 성장을 반복하게 되어 일반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어 가는 구조의 변화 과정을 말하며, 미시적으로는 기업 차원에서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 대응한 경영전략과 사업전략, 그리고 내부의 조직구조 개혁과 경영관행 개선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를 고려한다면 향후에는 어떻게 건설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면모시킬 것인지, 재도약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제는 무엇인지, 또 기업 차원에서는 어떻게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재탄생할 것인지를 깊이 있게 고민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시점이다. 당장에는 구조조정 명단에 포함된 업체들 중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건설기업들의 회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구조조정의 부정적인 여파가 건전한 건설업체들에 가지 않도록 하는 지원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 또한 금번 구조조정 명단에 포함된 건설업체들의 예에서 보듯 현행 건설 특히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에서 지나치게 부채를 떠안게 되는 건설사업의 사업구조 및 자금조달시스템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지식기반경제 하에서 산업 차원의 구조조정은 양날의 칼과도 같다. 바람직한 방향성과 수단을 가지고 수행된 구조조정은 타 산업에도 빠르게 효과가 전달되어 전체적인 국가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성장잠재력을 무시한 무리한 구조조정은 자칫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시아경제, 2010. 6. 25>

김영덕(연구위원.ydkim@cerik.re.kr)